

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비상

국내산업 원료확보난 · 가격상승 초래 ... 법률제정 등 대책 시급

6월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무기의 개발 · 생산 · 비축 ·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(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)으로 국내 화학산업도 원료의 적기확보 및 가격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.

정밀화학공업진흥회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대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관련 국제동향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.

이날 설명회에서 「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동향」을 주제로 발표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김일현박사는 이번 협약이 일반 화학산업(특히 농약 · 염료 · 도료 · 의약품 등 Chemicals분야) 관련물질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화학물질과 시설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이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현황도 신고와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화학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김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최근들어 실제 일부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의 화학시약을 해외에서 구매함에 있어 CWC의 간접영향으로 인해 종전과 다른 양상(획득지연, 용도 및 사용부서 명시 등)을 이미 보이고 있다.

아직까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며 규제물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Chemicals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기술의 이전을 기피함으로써 화학원료확보난 및 관련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, 기술개발 및 생산 위축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.

우선 수출입규제 및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한 화학원료의 확보 및 적기공급곤란과 가격상승 효과(선진국에 의한 국제화학제품의 독과점화 현상)가 나타날 전망이다.

또 무역규제 강화시 국내 화학제품 생산시설의 정상가동 곤란 및 가격상승으로 인한 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. 특히 Chemicals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무역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산업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.

순수 산업용 규제대상물질의 생산 및 설비투자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되고 신고 및 국제사찰 등 제반 검증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로 인한 시간적,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. 이밖에도 원료물질, 수급자정보, 생산정보, 제품정보, 출하량 등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.

화학무기 생산 등의 금지 및 화학물질의 생산, 교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협력조사 및 교육활동 등을 수행할 담당기관지정 등 국내에서의 협약대비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OPCW(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)준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각종 전문가회의의 참석 등 국제협력활동도 강화해야 한다.

<화학저널 1995/5/22>